

‘잊힐 권리’ 이달부터 본격 시행

자유기 힘들었던 게시물 삭제 개인사생활보호에 도움 기대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회원 탈퇴 등으로 자유기 힘들었던 ‘흔적(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돼 사생활 보호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게시물 작성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삭제 등이 가능해 기술적으로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지는 지적이 나온다.

제3자 작성 게시물 제외로 인한 반쪽 논란,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 등도 제기된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잊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자기정보 접근·제거요청권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이 이달 중 준비된 사업자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본인이 삭제하기 힘들어진 글을 삭제하거나 접근·제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잊힐 권리의 원조인 유럽이 본인 정보가 포함된 제3자 게시물 차단(접근·제거)을 허용한 것보다는 범위가 협소하다. 방통위는 제3자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규제수단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인터넷 게시물 삭제를 원하는 이용자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를 직접 요구하면 된다. 접근·제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례는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게시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 기리며

제11회 대한민국전통문화경호국영령합동추모제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일 오전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추모식에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부의장이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헌화를 하고 있다.

시물 내용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어려울 때 ▲회원 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되면 사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게시물 ▲회원 계정정보를 분실해 사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울 때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했을 때 ▲사랑방 이(死)가 생긴 게시글 ▲접근·제거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이 사자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제거를 요청할 때 등이다.

홈페이지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우면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검색기록에서도 삭제되기를 원한다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기록 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업계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 부문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네이버 측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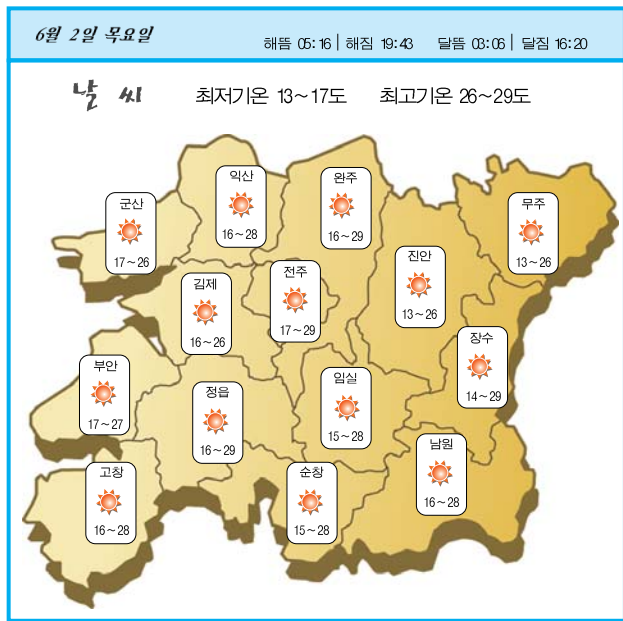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도 운영에 대한 기술적 문제 등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홈페이지 회원 탈퇴 해 개인정보가 삭제된 계정은 삭제 요청이 들어올 경우 본인 여부를 입증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첫째다. 업계가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 있

다는 것이다.

또 구글 등 해외 사업자가 본사 정책 등을 이유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사업자만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 돼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준비를 완료한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서 ‘가이드라인 시행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보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닌 사업자 자율 준수사항’이라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들이 실제 어느정도 준수하고 있는지는 적절한 시기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인진수기자



전북대, 산자부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선정

전북대가 정부의 에너지 관련 사업에 선정돼 관련 인력 양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1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연료전지 시스템 전주기 R&D 고급트랙사업단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정부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전북대는 앞으로 5년 동안 40억 원을 지원받아 학생들이 연료전지 분야에서 유망하고 안정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자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전북대가 새로 추진하는 연료전지 시스템 전주기 R&D 고급트랙 사업단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료전

지산화연센터와 협력해 연료전지 관련 전공교과과정 등 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용돼 기업에 특화된 스택 시스템 설계 및 제작, 평가 등이 모두 가능한 고급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유동진 사업단장은 ‘향후 10년 동안 70만 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유망한 분야’라며 ‘연료전지 관련 연구소 및 산업체에 우수한 고급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연료전지 산업 분야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주시의회, 한은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복원 촉구

전주시의회가 최근 지역정가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복원을 촉구 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한국은행이 6월 1일부터 5대 광역본부에 이어 인천본부와 강원본부의 화폐수급 업무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화폐수급 업무가 가장 절실한 전북 본부를 배제한데 대해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며 한은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복원을 촉구 했다. 시의회는 ‘지방조직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권을 지난 2012년 광주 전남본부로 빼앗기다시피 넘겨버렸다’며 ‘전북의 금융기관은 연간 최소 2조원의 현금을 80~100km 떨어진 광주전남 본부와 대전충남 본

부까지 운송, 막대한 운송 비용 및 도난사고 등 위험부담이 발생하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내 3대 지방은행이 소재 한 전북은 지역의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 집결에 따른 막대한 양의 화폐수급의 2차 공급처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지역 내 자금 과부족 해소 등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발휘를 저해, 지역경제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과 기금운용 본부의 이전을 토대로 금융 산업 특화 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어 전북 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복원은 막대한 바팀이 아닌 현실적인 필수조건으로 손꼽힌다’며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 복원 정당성을 제시했다. /김영재기자

농업기술센터, 체리 수확 체험 행사 오는 17일까지

자유롭게 시식...수확한것 300g 까지 가져갈 수 있어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농가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 지원하 는 체리(cherry) 수확철을 맞아 시민들 을 대상으로 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전주체리영농조합(대표 박종신)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체리 수확체험을 진행한다.

체리는 대부분 미국 등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수입 체리에 맞서 소비자의 맛과 기호에 맞는 안전한 국내산 체리로 대체해 고소득을 올 리기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재배 육성되고 있다.

체리 수확체험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전주체리영농조합은 지난 2014년부터

수확한 체리를 시민에게 직거래 판매 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체리영농조합에서는 2만6446㎡(8000 평) 규모에 일본품종 20여종(2010년 식재)과 미국품종 20여종(2014년 식재)이 재배되고 있다.

체험방식은 체험객이 30분간 체리포 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시식을 하고 300g 용량의 컵에 직접 수확한 체 리를 가져갈 수 있다.

추가로 체험객이 원하면 직접 수확

시 1kg당 2만5000원, 수확한 상품 구입 시 700g에 2만1000원에 판매한다. 체험시간은 오전 10시~12시, 오후 4시~6시 등 하루 2차례씩 진행되며, 비 오는 날에는 체험행사가 진행하지 않는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체리작목을 2015년 고소득 벤처농업 육성사업으로 선정해 체리재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가 기술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재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국립농업박물관, 유네스코 음식철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